

# 새 회계기준 본격 도입... 자본확충에 사활 건 보험사

(IFRS17(보험업신국제회계기준)·K-ICS(신지급여력제도))

업계, 도입유예·단계적용 요구에도 금감원, K-ICS 내부모형 절차 착수 IPO·영구채 발행 등 자본조달 분주



보험업계가 2021년 IFRS17(보험업신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건물 전경. /김희주 기자

IFRS17(보험업신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당국에 도입 유예를 요구했지만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제 살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준비상황과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IFRS17과 K-ICS의 도입을 유예하거나 단계적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두 제도의 동시 도입은 보험사들의 수익성은 물론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IFRS17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여력비

율(RBC)을 따지는 K-ICS도 2021년 동시에 도입된다.

K-ICS 적용 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해 재무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K-ICS에서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

율로 최소 100%가 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32개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중 RBC비율이 200% 이하인 곳은 15곳이다. 22개 생보사(IBK연금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제외) 중 7곳, 10개 종합 손보사 중 8곳의 RBC비율이 200% 아래다.

보험개발원은 "감독당국은 (K-ICS와 IFRS17)제도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사들의 도입 유예 또는 단계적 적용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지난 1일 K-ICS 내부 모형 승인 예비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리스크 측정시스템 개발에 대한 방향성 등을 감독 당국이 사전에 확인해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리스크제도 내 내부모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등을 하고 내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을 완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당장 3년 앞으로 다가온 두 제도에 대응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우선 교보생명은 IPO와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을 통한 5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 계획을 밝혔다. 교보생명에는 지난 2년간 IFRS17 도입에 대비한 자본 조달 전략을 마련했고, 올 초 K-ICS 초안이 확정되자 지난 3개월간 추가로 필요한 자본 규모를 추정했다.

동양생명은 해외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대신 해외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본을 쌓기로 했다. 채권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보다는 이자 부담을 절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국내로 방향을 튼 보험사들도 있다. 현대해상은 올해 3분기 중 5000억원 이내의 국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말 1900억원 규모의 국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에 IFRS17과 K-ICS의 점진적인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체력 강화를 위해 자본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oo.co.kr

## 저축은행 대출금리, 예금은행의 3배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 0.51%... 하락 전환

>> 1면 '은행 문턱 못 넘은...'서 계속

반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금액은 5월 기준 672조3667억으로, 작년 동기(628조2961억)에 비해 7%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양 대출기관이 증가세를 분석해 보면 은행권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비은행권 기업대출이 은행보다 고금리 대출이라는 점이다.

5월 저축은행 기업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는 연 11.02%로 예금은행 기업대출 금리(3.45%)의 3배를 넘는 다. 지난 5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5%로 지난해 11월 말(0.85%) 이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또한 4월 상호저축은행의 기업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8.38%였다. 1년 만에 0.32%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경제침체, 금리인상 등의 리스크가 불거지면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은행의 연체율 및 NPL(부실채권)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편이지만 최근 수출 부진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자지급 능력이 떨어져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담보를 걸고 대출을 실행한다고 해서 건전성을 안심할 수는 없다"며 "무엇보다 금융권은 기업의 사업현황을 보고 대출을 실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전월말 대비 0.11%p 떨어져

올해 6월 기준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이 0.11%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신규 연체 발생액을 웃돌아 연체채권 잔액이 감소한 것.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월 말(0.62%)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 또 지난해 같은 달(0.43%)보다는 0.08%포인트 높은 수치다. 대출 연체율은 전체 대출 원리금 중 1개월 이상 연체한 원리

금 비중이다.

이달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2조 9000억원을 기록해 신규 연체 발생액(1조 1000억원)을 웃돌아 연체채권 잔액(7조 9000억원)이 1조 8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0.28%)보다 0.03%포인트 내려갔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9%로 전월 말(0.19%)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신용대출 연체율은 0.40%로 한 달 새 0.09%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0.91%)보다 0.18%포인트 하락했다. 대

기업대출은 전월 말(1.81%)보다 0.18%포인트 줄었고, 중소기업대출은 0.21%포인트 하락한 0.48%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중 은행 연체율은 반기 말 연체채권 정리 효과 영향으로 5월보다 하락했다"며 "가계대출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연체채권 정리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연체 증가에 대비해 신규 연체 발생 추이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정부, 리츠 활성화 제도 정비 나서

>> 1면 '공모형 리츠...'서 계속

때문에 정부 및 국토부는 금융투자업계의 공모 리츠 상품 활성화를 받고 있다. 운용사에게는 공모형 리츠 상품을 장려하는 한편 각종 규제 완화도 구상하고 있다.

신한리츠운용이 해당 리츠 펀드를 공모형으로 모집한 것 역시 국토부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알파돔 딜(deal)을 따올 때부터 국토부는 개인들도 리츠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모형 상품 출시를 요구했다"면서 "때문에 1140억원 규모를 개인투자자들에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로부터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인가를 받은 이지스자산운용과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등도 향후 공모형 리츠펀드 출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아울러 공모형 리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투자 회사법 개정안'은 리츠의 일반 국민 공모 의무가 면제되는 연금의 투자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공모 리츠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장을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지만 청약기간 중 국민연금 등 '시행령에서 지정한 투자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면 상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다.

또 오는 9월 국토부는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비개발, 위탁관리형 리츠의 예비심사를 폐지해 상장 심사 기간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부동산에 출된 유동자금을 간접투자 상품으로 분산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리츠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부동산 간접투자자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정부 지원으로 공모리츠 시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증권가 "美FOMC, 9월 금리인상 신호 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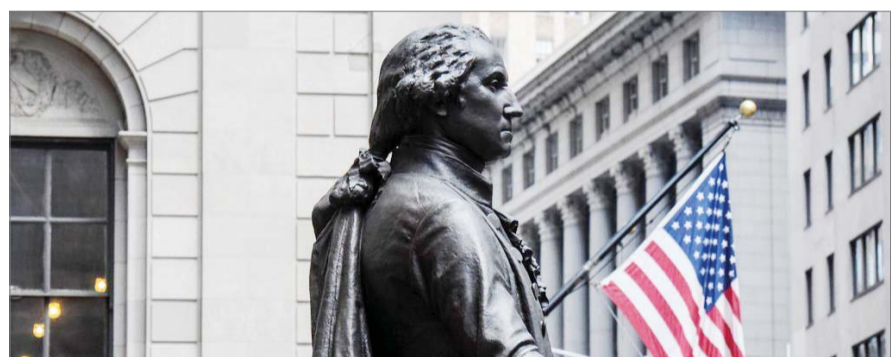
국내 증권가 전문가들은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8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목표금리를 1.75~2.00% 동결하면서 9월 금리인상의 신호를 전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박성우 흥국증권 연구원은 "이번 FOMC는 Fed가 성명서 내 경제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경기 확장 속도가 기존의 '견고한(solid)'에서 '강한(strong)'으로 변화했다"며 "기존의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를 이어갈 것인 인상을 줬다"고 분석했다.

또 최광혁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이번 FOMC는 기존의 경기 자신감을 확인하고, 연내 기준금리 4차례 인상에 대한 확신을 줬다"고 해석했다.

진용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라며 "9월까지 미국 경기가 견조함을 이어간다면 미국 연준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연율 4.1%(1분기 2.2%)를 기록하며 절대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KB증권에 따르면 이번 FOMC 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일(현지시간)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현 1.75~2.0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뉴욕 월가 뉴욕 증권거래소 근처에 서 있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동상의 모습. /연합뉴스

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선물시장의 9월 금리인상 확률은 92%로 전날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경기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에도 가파른 통화 긴축을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연준이 점진적인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여러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월가의 금리 인상 정점 논쟁과 대통령까지 가세한 금리 언급에 일단 중앙은행 차원에서 펀더멘털에 기반한 정책 정상화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시장 차원에서는 연준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 자체의 영향력은 중립적"이라고 덧붙였다.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은 물가 안정을 앞세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간접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지기자 sonumji301@